

관세폭탄 대응 전략

“피해 분석부터 대체시장까지” 맞춤 지원으로 수출기업 숨통

산업부-코트라, 온라인 설명회

관세 바우처 200곳에 첫 지원
중소·중견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현지 전문가 활용한 분석 주력
수출피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건축자재 수출기업 A사는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번 4월부터 적용된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사는 미국 수출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향후 미국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 피해분석 및 대응 전략 컨설팅’을 관세 대응 바우처를 통해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코트라 서울 본사 전경.

이에 산업부와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불안 해소와 애로 지원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 체제를 확대 운영하고,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에 민감하게 대응 중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지역별 ‘찾아가는 관세 대응 지방 설명회’를 미리 개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 신정부의 상호관세발효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개시, 1차적으로 4월 중으로 200여 개 기업의 관세

관련 영향분석 및 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17년 정식 출범한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간 ▲산업별 중소·중견기업 일반수출바우처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의 형태로 추진돼 왔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기존과 달리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해외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 역량을 활용한 관세 영향분석 및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바우처 사업 신청은 바우처 포털(exportvoucher.com) 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카테고리별 지원 세부 내용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발표로 수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차분히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전문가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대응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같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개시하고, 9일 오전 10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한국과의 교역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세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무보, 해외지사 긴급자금 수혈 나서

‘美 관세대응 긴급지원 TF’ 설치 장영진 사장 총괄, 부사장 유동지원 “위기 새로운 도전 기회로 바꿀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현황을 조사해 대응한다. 무보는 8일 ‘美 관세대응 긴급지원 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미국 관세 피해 긴급 대응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인 만큼, 장영진 무보 사장이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각각 유동성 지원, 공급망 재편 및 정책·홍보 파트를 맡는다.

TF는 우선 국내 18개 지사, 국외 23개 지사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피해를 접수한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기업을 포함해 주요 수출업종별·규모별 수출애로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과 베트남 등의 경우 해당 국가 소재 지사를 활용해 현지 정책동향과 기업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TF는 또 중소기업자금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대체시장 진출 및 신규 수입자 발굴 지원,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위한 시

설자금 및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무보는 앞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마련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이행하며 미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관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수출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60%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또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 및 신규 투자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2조 원 이상의 해외 투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거짓 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마이크로가드 주요 성분 유해

인체에 무해하다며 판매한 에이스침대 매트리스 소독·방충제가 인체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와 관련해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과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마이크로가드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촌융복합 고속성장 돕는다

스케일업 기업 5곳 선정 최대 5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고속성장 벤처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5개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곳은 굴메달, 영글어농장, 팜토리, 그레도팜, 슬로푸드이다.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의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유치한 민간투자금과 1:1 매칭으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5곳은 민간투자, 창업, 식품 가공·외식 등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굴메달은 제주의 다양한 품종 특성을 살린 시트러스 주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 F&B 공간 구축을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다. 영글어농장은 유기농 현미를 배지로 활용하여 버섯을 쌀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현미버섯쌀 양산화 및 비건 단백질 파우더 개발이다.

또 팜토리는 자사 스마트팜 재배 업체류 및 지역농산물 전처리 포장·판매, 회전식 수직베드형 스마트팜 설비 개발을, 그레도팜은 다양한 토마토 품종의 맛을 살린 디핑소스 등 제품 개발을 제시했다.

슬로푸드는 수출용 스와우트 파우치 형태의 배추 제조 및 부산물을 활용한 워터젤리 개발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와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선도 기업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12명 생명 구조

한전, 지자체 협업으로 안전망 확대

한국전력공사는 8일 첨단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한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통해 이날 기준 현재까지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전력, 통신(SK텔레콤, KT), 수도(수자원공사)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활 데이터를 AI로 정밀하게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SMS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다.

한전은 연간 3300억 건에 달하는 A MI(지능형 검침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보유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또 통신과 수도 사업자 참여를

이끌어 내 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재 전국 84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약 1만여 명의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 중이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에서는 전력 및 통신 사용량 급감 이상 신호 감지 후 현장을 방문, 의식불명 상태인 58세 남성을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전북 남원에서는 90세 치매 환자의 생활 반응 데이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현장 출동했고, 2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환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화 안부 확인과 방문 업무를 약 86% 감축시켜 업무 부담을 줄였고, 기존 IoT센서나 기기 설치 방식 대비 약 69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창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양평·평창서 ‘로드킬 방지 센서’ 시범 운영

환경부, LIDAR 설치해 감지

환경부가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찾길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지방 국도 2곳에 설치해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과 강원 평창이다.

동물 찾길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한다.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딥러닝)해,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 환경부는 포스코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찾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 지난해 설치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강원 횡성, 전북 남원 등 동물 찾길 사고 다발 구간 도로 3곳에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